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안 번호	1201
----------	------

제출연월일 : 2024. 6. 28.

제 출 자 : 정 부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지방행정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통장·이장의 법적 근거를 대통령령에서 법률로 상향 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를 각각 도입하고,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회 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며, 자치분권 사전협의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직접 규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산정기준 개선(안 제41조제1항)

지방의회의원 정수의 2분의 1 범위에서 도입하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지방의회 의원 정수가 홀수인 경우에는 추가적으로 한 명 더 둘 수 있도록 함.

나. 통장 및 이장의 법적 근거 상향 조정(안 제134조의2 신설)

행정동 및 행정리에 두는 통장 및 이장의 임명·운영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다.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안 제164조의2 신설)

- 1)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된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2)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협약안에 대하여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하고, 해당 협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함.

라. 분쟁조정기구의 전문성 강화(안 제166조제4항,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87조제3항제2호)

- 1) 행정안전부에 두는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 수를 11명에서 15명으로, 위촉위원 수를 5명에서 8명으로 각각 확대함.
- 2) 국무총리 소속으로 두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도지사, 시·도의회의 의장, 시장·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 시·군 및 자치구의회의 의장 등의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 4명을 그 위원으로 위촉하도록 함.

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약제도 도입(안 제183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특정 사무의 공동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등으로서 그 협력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함.
-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상호 간 체결하는 협약에는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도록 함.

바. 자치분권 사전협의 법적 근거 상향 조정(안 제212조 신설)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등과 관련하여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할 의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함.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지방자치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 “2분의 1”을 “2분의 1(소수점 이하는 올림한다)”로 한다.

제6장제4절의 제목 “하부행정기관”을 “하부행정기관 등”으로 한다.

제6장제4절에 제13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 ①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리에
는 이장을 둔다.

② 통장 및 이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 임명한다.

③ 통장 및 이장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4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64조의2(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2.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분담 기준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공공협약의 변경 및 종료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 강화 또는 공공협약의 효율적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공공협약안을 정한 후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공공협약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 해당 공공협약의 당사자 중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공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5명”을 “8명”으로 한다.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제167조제1항 중 “분쟁조정위원회”를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로, “7명 이상”을 “과반수”로 한다.

제183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의 주요 시책 또는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특히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를 위한 자원 확보 방안
4.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
5. 협약의 변경 및 종료
6.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 강화 또는 협약의 효율적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187조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 “4명”을 “5명”으로 한다.

2.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

제13장(제212조)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3장 보칙

제212조(자치분권 사전협의)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중앙분쟁조정위원회 및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① 이 법 시행 이후 제166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제166조제7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2025년 10월 3일까지로 한다.

② 이 법 시행 이후 제187조제3항제2호 및 제3호의 개정규정에 따라 추가로 위촉되는 행정협의조정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같은 조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정해지는 위원의 임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5년 3월 22일까지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 력) ① 지방의회의원의 의정활 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의 회의원 정수의 <u>2분의 1</u> 범위에 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의회 에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② (생략)	제41조(의원의 정책지원 전문인 력) ① ----- ----- ----- <u>2분의 1(소수</u> <u>점 이하는 올림한다)</u> ----- ----- ----- ---. ② (현행과 같음)
제4절 <u>하부행정기관</u>	제4절 <u>하부행정기관 등</u>
<u><신 설></u>	제134조의2(통장 및 이장) ① 행 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통장 및 이장은 주민의 신 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 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 또는 동장이 임명한다. ③ 통장 및 이장의 운영 및 지 원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 으로 정한다.
<u><신 설></u>	제164조의2(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약)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동으로 협력하여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협약(이하 이 조에서 “공공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할 수 있다.

1. 공동으로 처리하는 사무의 종류 및 내용
2. 각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3. 사무처리 비용의 조달 및 부담 기준
4. 분쟁해결 방법 및 절차
5. 공공협약의 변경 및 종료
6. 그 밖에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 강화 또는 공공협약의 효율적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의 협의에 따라 공공협약안을 정한 후 각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 ③ (생략)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는 각각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1명 이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 공공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내용을 각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가 제3항에 따라 공공협약의 내용을 고시한 경우 해당 공공협약의 당사자 중 시·도의 경우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시·군 및 자치구인 경우에는 관할 시·도지사에게 공공협약을 체결한 사실과 그 내용을 각각 알려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공공협약의 체결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66조(지방자치단체중앙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설치와 구성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중앙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지방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중앙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장과 위원 중 5명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행정안전부장관의 제청으로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앙행정기관 소속 공무원은 당연직위원이 된다.

1. ~ 3. (생략)

⑥·⑦ (생략)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분쟁조정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 7명 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③ (생략)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생략)

<신설>

포함하여 11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⑤ -----
----- 8명 -----

-----.

1. ~ 3. (현행과 같음)

⑥·⑦ (현행과 같음)

제167조(분쟁조정위원회의 운영 등) ① 중앙분쟁조정위원회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이하 “분쟁조정위원회”라 한다)-----
----- 과반수 -----
-----.

②·③ (현행과 같음)

제18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 의무)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협력 관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신 설>

인정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상호 간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특정 사무의 공동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의 주요 시책 또는 균형발전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협력이 특히 필요한 경우

3. 지방자치단체가 국가의 지원이 특히 필요한 사무를 추진하는 경우

4.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관계를 구축·강화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협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상호 간 협력 사항의 내용 및 범위

2.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및 업무 범위

	<u>3. 사무처리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u>
	<u>4. 사무처리 비용의 분담 기준</u>
	<u>5. 협약의 변경 및 종료</u>
	<u>6. 그 밖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협력관계 강화 또는 협약의 효율적 이행 등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u>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② (생략)	제187조(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조정) ①·② (현행과 같음)
③ 행정협의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고, 위원장은 제3호의 위촉위원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한다.	③ ----- ----- ----- -----.
1. (생략)	1. (현행과 같음)
<u>2. 안전과 관련된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u>	<u>2. 제182조제1항 각 호에 따라 설립된 전국적 협의체에서 각각 추천하는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4명</u>
3. 그 밖에 지방자치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국무총리가 위촉하는 사람 <u>4명</u>	3. ----- ----- ----- -- <u>5명</u>

④ (생 략)

<신 설>

<신 설>

④ (현행과 같음)

제13장 보칙

제212조(자치분권 사전협의) 중
양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
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
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
나에 해당하는 사항과 관련하
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
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에 영향을 미
치는 사무의 신설·변경·폐
지에 관한 사항
2. 지방자치단체나 그 장에 대
한 사무의 위임에 관한 사항
3. 지방자치단체가 수행하는
사무의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